

재외동포청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여론 조사(설문조사)을 통해 국가 기관 존치를 결정한다?

우리 청이 지난 20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공개질의서 중 “2. 여전히 재외동포들이 송도 청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천시와 우리 청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동포들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는 유정복 시장이 1월 12일 SNS에 게재한 글 중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자리함으로써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동포들 의견을 조사해 유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동포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수렴하겠느냐는 의미이지 여론 조사 결과로 청사 이전을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2. “동포청 신설 당시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유 시장은 지난 20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처음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당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는데...”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외동포청의 입지 선정 과정 회의록 등 자료를 보면 외교부, 여의도연구원 등 세 곳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을 두고 여론 조사를 했고,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청사 부지가 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3. 검토 이전 보류는 시간 벌기다?

‘이전 검토 보류’는 인천시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며, 시간 벌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현 청사 계약기간이 6월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1분기 내에는 검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박병규	(032-585-3107)
		담당자	사무관	박한울	(032-585-3246)

